

‘종전·평화협정’ 주체 3者냐 4者냐

북한 전문가들은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2007 남북 정상선언’의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 주체와 관련,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경남대의 김근식 교수는 이날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007 남북정상 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평가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경제협력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남북 군사신뢰구축 조치를 본격 논의하고 군사적 충돌의 최전선이었던 서해상의 긴장완화 조치를 본격 협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제·군사 병행구조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7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제하 발제문에서 “비핵화 미흡 논란”과 관련해 아쉬움은 남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9·19 공동성명과 실천조치인 2·13 합의를 재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구상을 남·북·미 3자였다”며 “정전협정은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전쟁의 공식종료

中 종전협정 서명했지만 당사국 지위 잊어
전문가들 “종전엔 배제, 평화는 참여 타당”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9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종전선언에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있는 중국을 제외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즉,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 정상 회담에서,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 과제와

수했다”며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바람직하지만 중국 참여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입장과 미국과 중국의 적대관계가 해소된 점을 고려한 실질논리 측면에서 3자회담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미가 종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 김근식 교수와 달리 종전·평화협정 모두 남·북·미 3자 가 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성배 책임연구위원은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포함한 4자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신뢰구축 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북·미가 직접 당사자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 종전협정은 4자가, 신뢰구축은 남·북·미가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김 교수나 고 교수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은 또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한반도 시간표를 고려할 때 ‘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식의 단계적 접근보다는 하나의 폐기지로 설정하기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한반도 정세 대전환기를 맞아 앞으로 1년의 정세변화가 향후 6~7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정부 ‘서해평화지대’ 별도 회담 추진

관련부처 참여 추진위 구성

정부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핵심사항인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북측에 별도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9일 “서해평화특별지대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데다 다른 사안에 비해 의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의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할 별도의 회담을 열 것을 총리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참여해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 추진기획단에서 공식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북측이 남측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위한 별도의 장관급 회담이 수시로 열려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북측이 내각과 군부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별도 회담 개최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남북 정상은 ‘2007 정상선언’에서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작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7년전 무산’ 김영남 南 담방 이뤄질까

“논의 없다” 불구 연내 가능성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남한 방문을 제안하면서 방문 시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현법상 국가수반인기는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된 북한 현실상 남한을 찾는다해도 특별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시기나 방법 등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남한 방문은 7년 전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도 추진됐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이 많다. 일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을 통해 김영남 상임위원장

의 서울방문이 거론됐기 때문에 7년 전에 비해서는 남측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기대에서도.

방문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이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

中 한국국제학교에

탈북자 7명 진입 실패

9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한국국제학교에 탈북자 7명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4명이 체포되고 나머지 3명은 도주, 전원 진입에 실패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한국국제학교에서 유치원생들이 하교하던 오후 3시께 탈북자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남녀 7명이 유치원생들을 밀치고 학교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베이징 =연합뉴스

“유서 없다 등 거짓말…욕 먹어도 마땅했다”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자숙후 첫 예배설교서 ‘회개’

지난달 아프간 피랍사태가 종결된 뒤 잠시 교단을 떠나 자숙기간을 가졌던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가 “아프간 피랍사태 직후 언론에 (피랍자들이 아프간으로 떠나기 전) 유서를 쓴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며 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샘물교회 등에 따르면 박 목사는 지난달 30일 교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뒤 처음 가진 예배 설교(7일)에서 “자숙기간에 많은 생각을 했다. 유서를 쓴 적이 없다고 말

한 것은 당시 단기선교팀이 탈레반에게 광신집단처럼 보여져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그랬고 언론이 우리(샘물교회)를 광신집단으로 볼까봐 걱정도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4일 미국 기독교잡지 크리스체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을 포함해 이슬람권 국가들에 더 많은 선교단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욕먹어도 마땅한 말이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박 목사는 이어 샘물교회 건물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서둘러서 입주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며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처벌을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샘물교회는 지난해부터 상가건물을 단계적으로 매입,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 용도변경이 아닙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목사는 지난달 8일 배형규 목사의 장례식 직후 교회에 사의를 표명한 뒤 자숙기간을 가졌으나 교회는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 지난달 30일 투표를 거쳐 암도적 찬성으로 재신임을 결정했다.

변인과 오마이리, 아카데미, 차기리 등 탈레반 무장대원 5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연합뉴스

검찰, 탈레반 5명 기소중지 처분

검찰이 분당 샘물교회 소속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프가니стан 탈레반 무장세력의 대변인 카리유수프 아마디와 살해에 직접 가담한 오마이리 등 나머지 탈레반

조직원 4명에 대해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안부(김태영 부장검사)는 9일 분당샘물교회 봉사단원 23명을 납치, 강금한 뒤 배 목사와 심씨를 살해한 혐의로 아마디 대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가 내년 봄까지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숫자를 2천5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8일 영국 경찰이 런던 화이트홀에서 팔러먼트스퀘어까지 반전시위를 벌인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라크 주둔 영국군 내년말 완전 철군

의 절반인 2천500명 수준으로 감축한 뒤 연말까지 제2단계로 전면 철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비록

브라운 총리는 전날 의회 연설에서 영국군 마지막 주둔지 바스라의 치안권을 이라크 보안군에 이양하고 내년 봄쯤 바스라 주둔 영국군을 현 병력

의 절반인 2천500명 수준으로 감축한

뒤 연말까지 제2단계로 전면 철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비록

브라운 총리가 철군 계획에 대해 신

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모든 영

국군은 계획에 따라 내년 말에 이라

크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연말 전

면철군’ 입장장을 밝혔다.

지난주 이라크 바그다드와 바스라를 전전 방한한 브라운 총리는 현지에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영국군 병력을 5천500명에서 4천500명으로 1천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여기에 영국군 2천명이 추가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이다.

/런던=연합뉴스